야당 국회의장 탄생 관심…3당 모두 법사위원장 '눈독'

여야 3당 이번주부터 원구성 샅바싸움 본격화

더민주 우상호 "협상 시작하자"

"속전속결…개원전 마무리" 공감

상임위장 배분 놓고 기싸움 치열

여야 3당이 이번주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신임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발표한 뒤 "이번 주부터 3당 원내대표 간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 드린다"고 밝혔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지형의 3당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원구성을 둘러싼 새누리당(122석), 더민주(123석), 국민의당(38석)의 샅바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임기 개시일인 2012년 5월 30일에서 한 달여가 지난 6월 29일에야 마무리됐다.

17대와 18대 국회 역시 한 달을 끌었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도 원구성 협상을 놓고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 거센 국민적 비판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여야 모두 법정시한 내 원구성 협상 종료를 강조하면서 속전속결을 시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의 태도는 과거보다 유연하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임기 시작일까지 원 구성이 안 되면 원이 구성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원구성 협상과 관련, "5월 중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6월 원구성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야당이라고 외교, 안보, 국방 문제의 중요성을 못 느끼겠느냐"며 여당 몫인 국방위와 외통위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쳐왔다.

그럼에도, 원구성 협상이 손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우선 국회의장단의 경우 재적 의원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지만 여야간 사전조율이 관례다. 의석수에 따라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인 더민주, 국회부의장은 각각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몫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국회의장은 국민의당 선택에 따라 새누리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는 더 풀기 힘든 고차방정식이다. 국민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서 3당 간 상임위 배분이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국회 상임위는 모두 18개다.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10개, 더민주가 8개 상임위를 확보했다.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할 경우 20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8개, 더민주 8개, 국민의당 2개로 배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새누리당이 복당 등으로 원내 제1당 지위를 회복한 뒤 국회의장을 요구할 경우 상황은 다소 복잡해진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경우 최대 3~4개 상임위를 확보할 수도 있다.

여야 줄다리기의 핵심은 법안처리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더민주에 내줄 경우 법사위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더민주 역시 제1야당 몫이었던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은 국회 운영의 핵심인 국회의장과 청와대를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을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나눠가질 경우 국민의당에 법사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몫이었던 정무위와 기재위는 차기 대선을 앞둔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그리고 더민주 몫이었던 국토교통위·농해수위·산업위는 지역현안 해결에 유리하다는 점 때문에 모든 정당이 노리고 있다.

한편, 더민주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갖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원내부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당 현안 대책을 함께 논의할 원내부대표단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욱, 백혜련, 우 원내대표,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박정, 강병원, 송기헌 법률부대표, 기동민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개원 3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 구성 마무리 수순

더민주 원내수석 충청권 박완주

새누리·국민의당 곧 인선 완료

제20대 국회 개원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원내대표단 인선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정책위의장 인선을 끝으로 원내지도부 구성을 사실상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도 9일 부대표단 인선을 완료하면서 원내 지도부 진용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더민주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기동민·이재정 초선 당선인을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튿날 대여 협상 최전방에 나설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 당선인인 박완주 의원을 지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8일에는 이훈, 백혜련, 송기헌, 유동수, 김병욱, 박정, 안호용, 문미옥, 최인호, 오용훈, 강병원 당선인 등 11명을 원내부대표로 임명했다.

당 대표가 임명하는 정책위의장 인선도 휴가를 떠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는 11일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정책위의장직은 재선 의원의 몫이었지만 원내 1당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엔 3선 의원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군으로는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했던 3선 당선인 우원식·민병두 의원 등의 이름이 당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7일 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 4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의원과 재선 당선인 김성식 의원을 각각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으로 합의 추대하면서 일찌감치 원내 '투톱'을 구축했다. 이후 김관영, 권은희 의원을 각각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 내정한 박 원내대표는 오는 9일 남녀 원내대변인과 원내부대표단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으로는 김영환 전 의원이, 원내대변인으로는 손금주 당선인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당선자 총회를 열어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부의장단을 포함한 원내지도부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는 오는 30일에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여유를 갖고 원내지도부 구성을 완료하려 했으나 야당이 원내수석부대표를 임명하고 개원 협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데 맞춰 속도를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지도부도 공백 상태이라는 점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내부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은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았거나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더라도 계파 색채가 옅은 인물을 중심으로 발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가습기 살균제 국회 청문회 열겠다"

당정 "검찰 수사후 추진…국정조사도 배제 안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청문회에서 진상 규명이 불충분할 경우 국회 국정조사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윤성규 환경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밝혔다.

권 의원은 청문회 개최를 검찰 수사 이후 검토키로 한데 대해 "수사받는 사건 관계인이 국회로 와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수사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 수사 결과에도 재발 방지책이나 원인 분석의 필요성이 있다면 청문회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의혹이 해소가 안 된다면 국정조사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번에 문제가 된 옥시레킷벤키저사(社)의 살균제 외에 국내에 유통 중인 살생물제(Biocide·원하지 않는 생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제조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위해성이 큰 제품은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 실시하는 선진 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 대처는 기존의 환경부 중심이 아닌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격상,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도록 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의 치료비·장례비 외에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용에 따른 폐질환의 역학관계 조사에 나서고, 피해 진단을 위한 판정 기준도 조속히 만들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담는 속에 같이 논의될 수 있다"면서도 "그 부분만 떼서 따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현재 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지경기자jkpark@